

“비상구에 자물쇠까지”...안전불감증 ‘심각’

광주 상무지구 상가 기보니

물건 적재로 피난 동선 미확보 대피 시 2차 사고 발생 우려 커 ‘신고포상제’ 접수 달랑 1건뿐

“코로나19 이후 출입명단 관리 때문에 비상구를 닫았는데 불법인지 몰랐어요.”

21일 오전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은 식당과 병원, 사무소, 체육시설 등이 입주해 있어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지만 피난대피로 상태는 엉망이었다.

비상구로 올라가는 계단과 복도 곳곳에는 청소 도구와 운동기구 등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상가 내 대피 동선을 안내하는 피난유도등 역시 적지 않은 물건들에 가려져 희미하게 불빛만 보였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정전시 비상구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와 쌓여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2차 사고도 우려됐다.

이어 옥상으로 올라가자 철문으로 된 비상구 문은 자물쇠 2개로 걸어잠궈 열 수 없었다. 피난 유도등 없이 비상구를 찾았다고 해도 자물쇠를 열 수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상가건물 관계자는 “건물이 중앙 출입문 이외에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을 위해 중앙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문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비상구를 잠금·폐쇄하거나 대피 동선에 장애물을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역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인근 건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상가건물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물건이 쌓여있어 통행이 어려웠고 다른 건물의 비상구는 굳게 닫힌 채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동안 비상구를 폐쇄한 다중이용시설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에 1건(장애물 적치), 2019년 1건(비상구 폐쇄) 뿐이다.

본부는 비상구 폐쇄·잠금 등 소방시설 관리가 미흡한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신고건수는 저조하다. 올해에는 북구에서 1건이 접수됐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신고포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으로 인해 비상구를 닫아놓은 건물이 많아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구 개방 등 자율안전관리 문화 조성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사진=김혜린 기자



21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건물 비상구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다.



제24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 21일 광주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앞 들녘에서 열린 ‘제24회 서창 만드리 풍년제’에서 농민들이 김매기를 마치고 농사를 잘 지은 머슴을 소에 태우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 ‘만드리’는 논을의 마지막 김매기라는 뜻으로 세 배 김매기를 할 때인 음력 7월15일 무렵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김매기이다. /김태규 기자

“김홍빈 대장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산악연맹, 영사조력법 개정 촉구

광주시 산악연맹 산악인들이 김홍빈 대장 구조 비용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광주 산악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김 대장은 광주 출신 산악인으로, 지금까지 국민께 꿈과 희망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추서한 체육

훈장 청룡장과 2021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선정 등 공적이 인정된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악연맹은 “김 대장은 국가가 국위 선양을 위해 고봉에 도전했고 브로토피크 등정을 마지막으로 장애인 최초 8,000m급 봉우리 14좌 완 등기록을 세웠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개정하고 정부의 구상권 청구도 재

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장의 등반이 개인의 영달이 아니고 국가가 국위 선양을 인정했다”며 “그러므로 관련 법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개정, 정부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산악연맹 피길연 회장은 “김 대장의 안타까운 영면이 헛되지 않도록 체육인을 비롯한 모든 분이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사무실 도청 의혹’...경찰, 광주시청 압수수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

직원 간 갈등이 벌어지던 광주시청 한 부서에서 사무실 도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근무했던 광주시청 혁신소통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른 직원과 갈등 관계에 있던 A씨는 자신의

자리에 영상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A씨 본인을 비추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카메라의 녹음 기능이 켜져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결국 광주시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혜린 기자

광주·전남 전기지부, 고공농성 돌입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불법하도급’ 근절을 요구하며 나주 한전 타워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21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지부 이경석 지회장이 나주시 한전 본사 인근에 있는 타워에 홀로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배전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복지·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불법하도급 근절이 우선”이라며 “한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경찰에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목포시체육회 직원 공금 횡령 의혹...경찰 수사

목포시체육회 직원이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목포시체육회 사무국이 직원 A씨가 공금 4억여원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체육회 사무국은 예산 집행 내역 등 서류를 살펴다 한 직원의 공금 횡령 정황을 파악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준 기자



글로벌 일류기업
건해건설(주)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무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준공
강원 동해시, 광주 용봉동, 서울 공릉동 등 아파트 644세대

진행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240호
영광 군서면 마읍리 연립주택 212세대

예정
대전시 동구 낭월동 희담재 아파트 258세대

대표이사 **이 현 각**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6
TEL. 062) 574-8501



www.gunhae.co.kr

기쁨을 주는 아파트

희담재
HEDAMJAE